

경제발전은 노력하는 지도자와 건전한 시장경제가 만나야 비로소 가능한 것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기업가이신 나의 선친께서는 60년대 당시 국내 언론과 정치 현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으셨다. 그래서 해외로 건너가 태국, 알래스카, 파푸아뉴기니 등지에서 많은 사업을 벌이셨다. 1965년에 수주한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는 경험이 없었기에 적자를 많이 봤는데,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88년엔 올림픽 유치위원으로서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지해내셨다.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2002한일월드컵 유치와 성공적 개최이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부임한 후 내게 주어진 소임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부회장이 되어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주어진 시간은 2년. 당시 FIFA 집행위원이 21명이었는데, 나를 제외한 20명 중 10명만 내 편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 부지런히 해외를 드나들었으며, 결국 1994년에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이 되었고, 이후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었다.

선친께서 유치하신 88서울올림픽이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린 행사였다면, 2002 월드컵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전 세계에 알린 행사였다고 자부한다. 월드컵 개최 이후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출입국카드에 국적을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적기 시작했고, 그때의 감동과 뿌듯함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나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기적의 역사라 생각한다. 지리적 위치상 유라시아 동쪽 끝에 붙은 소수민족이 그 고유의 문화를 유지한 것 자체가 기적이며, 그 기적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2005년 골드만삭스의 발표에 의하면, 2050년에 한국이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으로부터 40년 후다. 아시아개발은행도 비슷하게 보았는데, 2030년에 일본을 추월하여 2050년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50년은 어떤 해인가? 1948년 정부수립 후 100년이 되는 시점이다. 그 즈음에 우리나라가 세계 1, 2등을 다룬다면 역시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볼 수 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리더가 있으면 참 좋겠으나 선거를 통해 그런 인물을 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매번 나오기도 힘들 것이며, 국민이 알아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지녀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첫째, 비전과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비전과 통찰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다. 1995년도에 동아일보, 한국일보에 한국의 OECD 가입을 반대하는 칼럼을 썼다.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는데, 나는 OECD 가입은 득보다 실이 많으며, 멕시코처럼 바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997년에 외환위기가 왔다. 차기 대통령은 시장경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인들 모두가 시장경제를 잘 안다고 하나 그 실체를 보면 참으로 무관심하다.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남긴 유언 중 하나가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를 책임진다는 말을 하지 말라”였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의 발전은 노력하는 지도자와 건전한 시장경제가 만나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를 설명하기란 말처럼 간단하거나 쉽지 않다고 본다. 시장경제는 일종의 교통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수백만 개의 신호등을 사람 1~2명이 관리한다면 교통은 곧 마비되고 말 것이다.

나는 유럽의 금융위기를 정치리더십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향후 몇 년간 세계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비전이 중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나눔성장의 대표적 성공사례 국가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신념을 갖는 것이 필요할 때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약, 저축, 투자, 생산성향상의 원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가계저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였으나 현재는 가장 낮은 나라로 변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의 수출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 보며, 2017년까지 수출을 1조 달러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정립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초기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쓰다가 가격통제를 하는 정부로 바뀌었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라서 선거로 정부를 뽑는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선에서 시장에 개입한다. 단지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 찰머스 존슨 버클리대 교수는 정부의 시장개입엔 시장축출형과 시장친화형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개입하는 시장친화형이 효과적인 시장개입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제민주화’, ‘자본주의4.0 실현’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포괄적 행정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국내제품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내부거래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김일성, 김정일을 만나서 파안대소하는 분들이 있었다. 조금 걱정이 됐다. 사람들은 나보고 “선진께서 금강산 사업도 하고 북한에 쌀과 소도 보냈는데 왜 당신은 북한에 대해 엄격하냐”고 묻는다.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 나는 남북관계가 현재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한다.

국가 대 국가의 기본적인 관계는 공포의 관계이다. 두려움의 관계에서 존경도 받으면 좋은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면 최하 아니겠는가. 남북관계를 정상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칙대로 움직여야 한다. 나는 남북한 비핵화 합의를 하고 전술핵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를 추진하자 중국의 글로벌타임즈가 3월자로 기사와 사설을 써서 추진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때 중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에 ‘제대로 관심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핵 동향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다.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가셨을 때 특별수행위원으로 함께 갔었다. 당시 햇볕정책에는 3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북한의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핵무기는 절대무기이며, 어느 나라든지 만들겠다는 계획만 있어도 군사도발이 된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다 만들고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햇볕정책’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오늘날 핵무장한 북한과 남한이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공존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국방성 고위책임자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이 핵을 쓰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무사할 리가 없을테니 말이다. 그는 “모든 정치권력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바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인 정권이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에 기습작전을 펼 후 휴전을 제안할 것이며, 한국 내부의 분열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넷째, 글로벌 리더십과 함께 정직함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을 알면 독선이 필요없다고 본다. 소통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평범해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엔 현명한 결정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포퓰리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치인은 이완용과 마찬가지로 본다. 진보라고 할지라도 ‘보수의 공과 과’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 시대뿐만 아니라 박정희, 이승만 시대에 대한 냉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더불어 정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기업과 경제계가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길...

국내에 언론매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로 인해 의사소통이 활발해진 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국민들이 경제계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경제계의 리더십이 예전 같지 않은 듯하다. 그 이유는 경제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서가 아닌가 싶다.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급속도로 변하는 이 사회에서 국민들이 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규범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경제계가 한 발짝 더 앞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Q & A

Q1.

남북관계와 시장경제를 아우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시대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을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A1.

통일이 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겠는가. 사회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정책을 만들 수 있겠는가.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 통일개발에 대한 의논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경제는 사회에 포함되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에서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통일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묻기 전에 북한인들에게 자유를 먼저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Q2.

기회주의적인 보수층이 많다고 본다. 보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A2.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사회전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경제는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전체적인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종건 혹은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기업시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기업시민으로서 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를 실천한다면 본인도 좋고 회사도 좋고 나라도 잘되지 않겠는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를 위한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

Q3.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3.

일본이 원자력관련법에 '국가 안전 보장 목적'을 추가했다. 일본은 실질적으로 핵무기 보유 국가라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5천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고 원자탄을 만들겠다고 하면 2주일 만에 만들 능력을

Q & A

가진 나라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그런 구절을 넣었을까? 3당이 합의해서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9월에 총선이 예정된 판에 3개 정당이 합의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완벽한 합의이며, 일본 국민도 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을 두고 한 것이라고 본다. 경제·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낀 일본이 내세울 건 원자력이라고 판단했다면 심히 우려되는 현상이다. 일본은 사실상 원자력 국가라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북쪽에 러시아가 수천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한국, 일본을 상대로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이 또한 우리로서는 우려되는 일이다.

루버트 머독이 오늘 이 시점에 전 세계 톱뉴스 하나를 꼽으라 하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라 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는 이미 제조가 완료된 상태고 기술이 이란보다 3년을 앞서갔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가 이란이라면, 북한은 왜 1등 뉴스가 아닌 것일까? 우리는 북한의 코앞에 살고 있으면서 북한을 우리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 같다.

Q4. 유로존발 위기가 앞으로 전 세계에 미칠 영향과 한국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궁금하다.

A4. 유럽의 위기는 경제위기라기보다는 정치적 리더십의 결핍에서 오는 위기라고 본다. 키신저 전 장관은 유럽을 부를 때 '음모의 대륙'이라고 했다. 유럽은 키신저 장관에 의하면 정치적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다. EU가 형성되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관세를 다 허문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싶다. 단일정부 없이 단일통화를 한 건 너무 앞서갔다고 본다.
특히 유럽의 경제위기는 한국에게는 억울한 면이 많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는 잘못된 게 없으면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